

석유화학정책과 자유화

한국 석유화학 산업계가 혼란과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92년 들어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동남아지역 수출이 활성화, 95%대의 공장가동률 및 재고 감소로 아연 생기가 돌던 석유화학산업에 돌개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출이 잘 되고, 가동률이 높다고 해서 당장 흑자를 낸다거나 정상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동비를 50~100달러 웃도는 가격에서 수출이 이루어질망정 생산물량은 소화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는 당분간일지라도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다.

여기에 수출가격만 톤당 800달러선을 회복하고—물론 국제가격이 근접하게 상승해야 되겠지만—기존의 동남아 거래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한국 석유화학산업계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는 하루 아침에 밝은 햇살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실권자 등소평이 광둥성을 홍콩 못지않은 특정 경제지역으로 육성할 뜻을 내비치고 있으며, 자유경제체제(자본주의는 아닐지라도)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 서서히 개방화시킬 준비단계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달러」를 확보한다면, 그들의 수요 또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2~3년 후의 전망이기는 하지만….

또한, 급전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물결 및 그에 따른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수요는 적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심연 한가운데 띄워진 「지푸라기」 이상의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결코 칠흑같은 어둠속은 아닌, 등대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징조앞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당황해야만 할 이유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공부를 위시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 조짐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상공부가 최근 마련중인 「석유화학정책」의 내용은, 대충 NCC를 비롯 합성수지·합성고무 등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의 투자는 제한하되, 대림산업·유공 등 기초유분 공급상 불가피한 기업에는 합성수지 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 지난해 11월 재무부를 통해 시중은행에 통고한 「석유화학 투자재원 대출 중단」 조치를 대림·유공에게는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밀화학 중간체 및 신소재부문 투자허용 또는 장려는 대림·유공에 대한 구제조치의 들러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님은 분명하다.

즉, 재벌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에서 적게는 50억~100억원, 많아야 300억원 안팎이 투자되는 정밀화학·소재부문 투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없고, 준비가 없어서 손대지 못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부문 투자는 짧아도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손대기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화학 전문가들 어느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중단」 조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숨통을 터주는 한편, 90년 투자자유화조치 이후 무분별한 신·증설로 인해 기초유분 공급난을 겪고 있는 대림·유공의 얼어붙은 마음을 달래주는 정책을 펼 작성임에 틀림없다.

즉, 상공부의 90년 「석유화학 투자자유화」 조치의 무모함, 삼성·현대 등 거대 재벌 앞에서의 무력함, 그로인해 파생된 석유화학산업의 부실화, 뒤늦은—삼성·현대의 투자가 마무리된 뒤의—대출중단과 이로 인한 기존업체들의 피해와 원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책을 선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90년의 「석유화학 투자자유화」 조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몇몇 독점재벌에 국가의 부를 독식당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자유경제체제에서 특정사업을 제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 순위를 조정, 순차적으로 공장을 완공토록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물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대출중단」 조치를 일방적으로 매도할 생각도 없다. 국민의 돈을 가져다 산업을 부실화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89년에, 늦어도 90년 투자자유화 시점에서 취해졌어야 했다. 삼성·현대만 예외일 수는 없지 않는가?

오늘, 대림·유공을 제외한 어느 기업도 NCC나 합성수지 투자를 계획하겠는가!

정부는 무리한 「투자조정」이나 「대출중단」 정책보다는,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격자유화는 투자자유화에 앞선 시점에서 취해졌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 가격 자유화만이 투자를 순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다.

사업성은 투자비와 가격이 결정한다.

상공부는 석유화학 가격에서 손을 떼라!

<화학저널 1992/3/1>